

“수입업자 등쌀에 이 립 표 못 달 어”

— 뉴질랜드산업위, 녹용 원산지 표시 국내 수입업자 핑계들어 거부 —

외산녹용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녹용 표면에 국가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해달라는 본회의 요청을 뉴질랜드가 거부했다.

본회는 지난해 12월 국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근절시킬 방편으로 녹용 표면에 국가식별이 가능하면서 위·변조할 수 없는 고유 표식을 실시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본회는 국가 식별 표식이 한국에게는 불법 생녹용 유통 근절을, 뉴질랜드에게는 그들이 누차 강조해온 ‘뉴질랜드산 녹용이 어디에서든 정확한 표기로 판매되기를 바란다’라는 주장에 부합되기 때문에 양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식별 표식을 요청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산업위원회(Deer Industry New Zealand)는 ‘한국 수입업자 반대’라는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측은 지난 1월 7일자 회신을 통해 “뉴질랜드는 현재 전지녹용에 플라스틱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으나 이마저 한국수입업자들이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매자의 요청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뉴측은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식별이 가능한 절편녹용이 하루빨리 수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뉴산 절편녹용 수출 욕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전지녹용은 원산지 표시없이 팔고 절편녹용은 원산지 표시를 이유로 수출하겠다는 것은 자국 이익에만 혈안이 된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분개하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절편녹용이 수출되면 전지녹용 수출은 응당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국내 수입업자들이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국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시키겠다는 의도밖에 더 있겠냐”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뉴질랜드는 결국 수입녹용 불법유통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는 범법자”라고 공격했다.

본회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알려 철저한 수입녹용 검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불법유통 수입녹용 색출활동을 주장할 계획이다. **민도원 기자**

